



SK 사옥 전경. /SK

자산 팔아 10조 확보 AI·로봇 중심 재정비

리밸런싱 속도내는 SK

SK(주)가 지난해부터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정비를 위해 구조조정과 계열사 매각을 진행하면서 리밸런싱(사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SK는 확보한 유동성으로 미래성장사업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전기차 배터리 사업 등에 추가 투자해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 계열사들이 자산 매각을 통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열사 매각 완료한 ‘10조 실탄’ 비핵심 털고 미래산업 집중투자 사업 재정비로 재무 안정화 박차 유일로보틱스로 휴머노이드 도전

SK는 최근 1년 사이 SK스퀘어 크래프톤 지분 매각(2660억원)을 시작으로 ▲SK렌터카(8200억원) ▲SK엔펠스 파인세라믹스 사업부(3303억원) ▲SK엔펠스 CMP패드 사업부(3346억원) ▲SK넥실리스 박막 사업부(950억원) ▲SK스페셜티(2조6000억원) 등을 처분했다.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 총 4조4459억원이다,

이외에도 SK그룹은 ▲SK실트론(예상 매각가 3조원)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리뉴원·리뉴어스(2조원) ▲SK오션플랜트(5000억원) ▲서울공항리무진(580억원) 등도 매각 대상에 올라 있다. 매각이 성사되면서 SK그룹은 추가로 5조5000억원이라는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계열사 매각으로만 1년 사이 10조39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SK가 리밸런싱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재정비를 통한 재무안정화다,

SK는 그동안 각종 인수합병(M&A) 및 투자 등을 통해 외형을 키우면서 중복된 사업이 발생했고, 덩치에 비해

실적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실제 SK그룹의 2024년 연결기준 매출은 124조6904억원으로 2023년(128조7984억원) 대비 3.19% 줄었다. 영업이익은 2조3552억원으로 2023년(4조7539억원)대비 50.46% 급감했다. 부채비율은 2023년 말 145%에서 지난해 110%대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재무부담이 SK를 짓누르기 했지만 확보한 유동성으로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밸런싱을 통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방대한 사업영역을 미래 성장 산업인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 플랫폼 등으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SK는 유일로보틱스 인수를 통해 로봇 기술의 정수로 꼽히는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공장에 투입될 로봇 기술을 상용화하고 향후 범용인공지능(AGI) 기반의 휴머노이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로봇시장 진출은 최근 AI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최태원 회장 역시 평소 AI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그룹의 미래 주력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 에너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SK증권 최관순 연구원은 “올해 자체 사업 및 비상장 자회사 실적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자산 리밸런싱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된다”며 “반도체 부문의 비상장 자회사와 자체사업 실적이 개선되고,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효과가 더해져 전반적인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SK 관계자는 “당분간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이 속도감 있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기준금리 동결… “美 관세 여파 지켜봐야”

한은 금통위, 금리 연 2.75% 유지
트럼프 관세정책에 불확실성 증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국내외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금리 인하 시점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3면>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2.75%인 기준금리를 유지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연 3.5%였던 금리를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0.25%포인트(p)씩 내린 뒤, 올해 2월 한 차례 더 인하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속도에 제동을 건 이유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칠 영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트럼프는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4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90일 유예와 협상카드를 꺼내든 만큼 시간을 두고 그 여파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미 관세정책의 변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라 전망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하시기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변수도 남아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아직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조정 해프닝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3만2000호(1월)에서 6만 호(2월)로 늘었다.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조정하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한번 늘어난 매매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돼 4~5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서울 지역의 주택시장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거래량이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이후 둔화됐다”며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달러 가치 올들어 8% 넘게 폭락

올해 들어 미국 달러화 가치가 8% 넘게 급락하면서 40년 만의 최악의 기록을 보였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6일(현지 시간) 전장 대비 0.77% 내린 99.38을 나타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최저치다.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달러인덱스 하락률은 7.69%로 1995년(-7.88%) 이래 40년 만에 최악이다. 16일에도 달러화가 급락해 올해 연중 하락률은 8.5%로 커졌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정년연장·직무성과급제 ‘뜨거운 감자’

대선 앞두고 정년연장 여야 공감대
직무급제는 노동계 반발 극심 예상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년 연장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6·3 조기대선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정년연장과 직무성과급제는 노동계와 산업계의 해묵은 과제로 일자리 정책과 임금 체계에 갈을 대는 주제인 만큼, 정치권·노사의 이견이 커 21대 대선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들의 입장이 공약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연장은 고령화·저출생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법정 정년 60

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1969년생 이후) 사이에 ‘소득 공백기’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다. 2033년부터 60세 퇴직자는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갖게 된다.

직무성과급제는 단순히 직장에 다니는 연수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 받는다. 직무성과급제는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돼 있다.

임금체계 유형은 2023년 6월 기준(복수응답)으로 호봉급(근속·연공급)

12.7%, 직능급(근로자의 직무능력 또는 숙련 정도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제도) 9.4%, 직무급 8.9%, 기타 기준 13.3%, 무체계 64.0%였다. 같은 조사에서 임금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호봉급 사용률이 12.4%에 불과한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선 54.4%로 큰 차이가 났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직무성과급제 개편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풀어보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빠지며 논의가 멈춰선 바 있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한 대통령 권한대행 “APEC 정상회의… 한 치 오차도 없도록 만전 기해달라” /사진 뉴시스
▲정부, 수계관리기금 위법·부정 적발… 농지보전부담금 922억 누락 등

▲한·네덜란드 3차 경제공동위 개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더 강화”
▲국방부, 대선 앞두고 전 군에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 하달

▲제주도의회, ‘5월 임시회’ 안 연다… ‘6·3 대선’ 고려해 변경
▲군, 광자기술·인공지능 활용해 멀리있는 소형 드론 탐지·식별한다